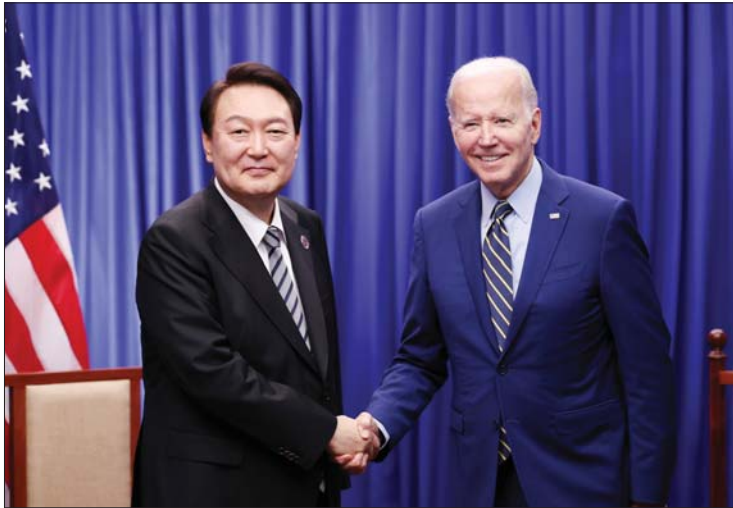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통령실 이전 기념 어린이·주민 초대 행사에서 일일 장터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조성된 용산어린이정원 인근에서 열린 개방행사에서 손인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정식 “노동개혁 기틀 마련… 근로제 개편, 사회적 대화”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채용질서 공정성 제고 평가
“하반기 노조법 개정 등 추진
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

“지난 1년은 부족하지만 개혁의 기틀과 청사진을 마련했다. 알맹이를 채우고 보완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8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소회를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취임 이후 윤석열 정부 노동분야 국정과제 가운데 노동개혁을 1순위에 뒀으나, 노정 관계는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노사법치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어서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일 전국 지방노동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이 장관은 다만 “노동개혁의 기틀과 청사진을 마련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해서 다수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남은 과제는 알맹이를 채우고 보완하고 사회적 대화를 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거운 과제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하는대로 사회적 대화를 하려고 한다”며 “법치의 기초 위에서 상생 연대를 꽃 피우는 게 노사관계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조 회계 자료 제출 압박

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회계 투명성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과태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334곳에 대해 회계를 스스로 점검해 그 결과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달엔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한 50여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고, 현장 조사를 강행하며 노동계와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한 노동계 의견 수렴과 관련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적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개혁의 동력은 내용이나 절차적 정당성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적 동의와 지지”라고 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게 시간을 걸리더라도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며 “근로시간 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사 토론회에도 우리가 참석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노동계가 불참한 상황이었다. 남은 기간에는 당연히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노동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칙으로 제시한 ‘노사법치’가 노조만 겨냥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노조도 조합원들을 위해 있는 것이지, 노조 간부를 위해 있는 건 아니다”며 “국가 경제나 전체 노동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있고, 법을 통해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를 도와주고 있으니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주요 실·국장과

48개 전국 지방관세장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중구조 개선과 약자 보호를 통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1년,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다”며 “법을 존중하지 않고 힘으로 해결하려는 오랜 관행을 더이상 외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고용세습 근절 등 채용질서도 공정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우선 채용이나 특별채용 단협조항은 시정토록 하고 있으며,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중심으로 불공정 채용을 집중 점검하고 공정채용법도 조기에 입법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법을 지키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면서, 하반기에는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노조법 시행령 개정 등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정황근 “쌀·농축산물 수급 안정… 스마트농업 등 신산업화 기반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성과에 식량자급률 개선 꼽아
“민관 협력 통해 가루쌀 산업화 추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쌀과 농축산물 수급 안정 등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에 대한 근본 해법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농업이 생산중심의 답습적 모습에서 벗어나 수십 년 앞을 내다보면서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도록 청년농 육성,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화 기반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 쌀 수급균형·식량자급률 제고 “두 마리 토끼 잡아”

정 장관은 우선 지난 1년의 성과로 쌀 수급균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꼽았다. 쌀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농정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농식품부

밀·콩 등 주요 작물의 자급률 저하에 따른 식량안보 취약성 해소를 위해 기존의 임기응변적 대책에서 벗어나 가루쌀 산업화와 전략작물직불제 제도화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면서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평가다.

새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쌀값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2022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90만 톤을 매입하는 대책을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발표해 전년 수확기부터 하락하던 쌀값을 16.7% 반등시켰다. 밥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뿐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할 수 있도록 가루쌀을 새 정부 1호 정책으로 추진하고, 기존 한시적 사업이던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해 법제

화했다.

K-푸드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포괄하는 K-푸드플러스 수출 산업화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지난해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118억달러(농식품 88억달러, 전후방산업 30억달러)를 달성했다. 또 미래성장산업화 동력확보를 위해 10년 만에 식량안보와 농식품혁신을 두 축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 청년농·스마트팜·푸드테크·그린바이오·반려동물 등의 업무를 추진할 전담 조직도 신설했다.

우유의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낙농산업의 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지난 10년간 추진하지 못했던 용도별 차등가격제도 도입을 위해 농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생산자단체 등과 적극 소통해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정 장관은 “취임하기 전부터 농성하는 여의도 현장도 방문하고 정말 끈질기게 협의해서 결국 관철시켰다”며 “그랬더니 벌써 아이스크림과 연유 등

국산 가공유가 50% 이상 증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 농가 경영안전망 기반 … “식량주권 100년 대계 세울 것”

정 장관은 향후 농가 경영안전망을 기반으로 농업인과 함께 식량주권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농업인과 약속한 바와 같이 2023년산 쌀값을 20만원/80kg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가루쌀 등 전략작물 생산을 확대해 지속 하락하던 식량자급률을 올해부터 반등시키고 2027년까지 55.5%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밥쌀 재배면적 1만6000헥타르(ha) 감축 등 적정 생산 대책을 강화하고, 가루쌀 생산 확대와 함께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가루쌀 산업화를 본격 추진한다. 전략작물의 생산·소비를 위한 전용 농기계 개발·보급과 공공비축 확대 등을 통해 밥쌀 중심의 생산구조를 바꿔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